

# “균형발전, 특단 대책 필요”

민주 김윤덕 의원,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질의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이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시종 2 추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선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전반기적 면모를 부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 123조 2항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라며 “지역과 수도권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고, 당정논의 및 협의를 통한 후속대책 및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상 기준의 확대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타당성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 이외에도,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더 과감한 규제개선 및 정책자원을 주문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있어 정부의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현판식 마치고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에서 제1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배 김제시장, 송하진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 “현 정부, 갈등 조장 ‘갈갈이 정부’”

국회 정운천 의원, 대정부질문서 국민통합 방안 제시

국회의원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국민통합위원회)은 22일 제388회 임시국회 정치·외교·안보특별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갈갈이 정부”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킨 시대를 제시하고, 4년 전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대신 국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갈갈이 정부”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킨 시대를 제시하고, 4년 전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대신 국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출신인 김부겸 총리에게 ▲소득 양극화만 완화시킨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 ▲대한민국을 틀로 갈라놓은 조국 사태, ▲교육의 사다리마저 끊어 버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불공정을 통해 분열만 양산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민들을 좌절시킨 N사태와 최악의 부동산 상황을 만든 임대차 3법 등 대표적인 국민 갈라치기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의 역사로 기록되는 양상을 지적하며, “갈갈이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정운천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국민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5·18 문제를 국민통합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41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다녀왔다”라며 “정부가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국민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과학기술에 있다고 확신한다는 양향자 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은 원자력 발전인 만큼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전력지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탈빛내륙철도”,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운천 의원은 “발생한지 73년이 지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규명과 유족에 대한 지원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운천 의원은 국민들을 갈라치기 짓어 놓은,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장하는 “갈갈이 정부”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킨 시대를 제시하고, 4년 전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대신 국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출신인 김부겸 총리에게 ▲소득 양극화만 완화시킨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 ▲대한민국을 틀로 갈라놓은 조국 사태, ▲교육의 사다리마저 끊어 버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불공정을 통해 분열만 양산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민들을 좌절시킨 N사태와 최악의 부동산 상황을 만든 임대차 3법 등 대표적인 국민 갈라치기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의 역사로 기록되는 양상을 지적하며, “갈갈이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정운천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국민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5·18 문제를 국민통합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41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다녀왔다”라며 “정부가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국민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과학기술에 있다고 확신한다는 양향자 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은 원자력 발전인 만큼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전력지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탈빛내륙철도”,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운천 의원은 “발생한지 73년이 지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규명과 유족에 대한 지원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 최인규 고창군의회, “30년 넘게 몸담은 민주당 탈당할 것”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와의 갈등으로 탈당했다.

최 의장은 2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30여 년 넘게 몸담아 온 민주당을 탈당하려 한다. 이 지리에 서기까지 저의 고민은 깊고 깊었다”며 “그간 지역위원회와 빚어진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했던 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정읍·고창지역위원장과 고창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갈등을 시작으로 모든 행사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으로부터 6개월 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 “아동 지문 정보 의무적으로 사전등록해야”

성경찬 도의원,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이 “매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만 건 인구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 실종아동 중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지문 정보등을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

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구를 위해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이어서 현재까지 18세 미만의 지문정보 사전등록 대상자 792만 8,907명 중 56.32%에 해당하는 4,466,234명만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성경찬 의원은 “지문정보 의무 등록이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하는 등의 실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개정 촉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민원 1년 이상된 악취배출시설 시·군 협의 후 매입

김만기 도의원, 악취방지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의원이 도내 고질적인 악취의 발원색원'을 위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정읍 18.28%(2,677개소)로 도내 가장 많은 악취배출시설 등록되었고 이어 김제 11.05%(1,614개소), 익산 9.48%(1,385개소) 남원 8.99%(1,31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의원이 도내 고질적인 악취의 발원색원'을 위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정읍 18.28%(2,677개소)로 도내 가장 많은 악취배출시설 등록되었고 이어 김제 11.05%(1,614개소), 익산 9.48%(1,385개소) 남원 8.99%(1,31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달라진 국격 확인... 외교지평 확대 노력”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유럽 3개국 순방 총평

“국제사회 책임·역할 강화... 여전히 부족, 해결 과제 많아 국가발전 외교·경제협력에 활용... 국민 삶 향상에 전력”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럽 3개국 순방의 의미를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국민이 단합해 노력한 결과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추후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며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적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야만 함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국가적 발전을 외교와 경제 협력에 적극 활용하면서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줄지 바란다”고 당부했다.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야 할 때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수준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낙후된 분야도 많다. 어떤 때는 선진국이지만 어떤 때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세계 하위권이거나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분야에서는 소관부처가 특별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며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적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야만 함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국가적 발전을 외교와 경제 협력에 적극 활용하면서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줄지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 ‘일본지도에 독도 표기? 있어서는 안될 일’

나인권 도의원, 도쿄올림픽조직위 규탄 결의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가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올림픽 정신을 대립시킨 일본 지도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나인권 도의원(김제2)은 일본 영토에 독도 표기한 도쿄올림픽조직위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 일본 정부와 조직위를 강력 규탄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미 확인됐고, 온 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미 확인됐고, 온 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지도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나인권 도의원(김제2)은 일본 영토에 독도 표기한 도쿄올림픽조직위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 일본 정부와 조직위를 강력 규탄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미 확인됐고, 온 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미 확인됐고, 온 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학교 내 1회용품 사용 저감 제도적 근거 마련

김이재 도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환경오염 예방 담야

전북도의회 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 전주4) 의원이 제382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전북교육감 소속 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을 줄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그간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합성수지제일 등 1회 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는 미약했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등 인식 개선과 대처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저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만큼, 교육 기관을 기점으로 도내 유관 기관에도 관련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 내 1회용품 사용 저감 제도적 근거 마련

김이재 도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환경오염 예방 담야

전북도의회 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 전주4) 의원이 제382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전북교육감 소속 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을 줄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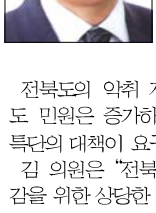
김이재 의원은 “그간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합성수지제일 등 1회 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는 미약했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등 인식 개선과 대처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저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만큼, 교육 기관을 기점으로 도내 유관 기관에도 관련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민원 1년 이상된 악취배출시설 시·군 협의 후 매입

김만기 도의원, 악취방지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의원이 도내 고질적인 악취의 발원색원'을 위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정읍 18.28%(2,677개소)로 도내 가장 많은 악취배출시설 등록되었고 이어 김제 11.05%(1,614개소), 익산 9.48%(1,385개소) 남원 8.99%(1,31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김만기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내 악취민원은 지난해 2018년도 1,081건, 2019년도 1,383건, 2020년도 1,497건으로 도내 악취 민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북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에도 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매년 악취 저감을 위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줄이지 않는 상황이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질적 악취배출시설을 매입해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소하면, 대기환경이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원 1년 이상된 악취배출시설 시·군 협의 후 매입

김만기 도의원, 악취방지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의원이 도내 고질적인 악취의 발원색원'을 위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정읍 18.28%(2,677개소)로 도내 가장 많은 악취배출시설 등록되었고 이어 김제 11.05%(1,614개소), 익산 9.48%(1,385개소) 남원 8.99%(1,31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에도 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